

# “국도·국지도 노선 일괄예타 통과 환영”

### 민주 김윤덕 의원 “사업 차질없는 추진·지역 현안 해결 위해 힘 모아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 갑)이 지난 24일 기재부 재경위 심의 결과 전북도민의 약 20년 숙원사업이었던 노을대교를 비롯해 전북지역 국도·국지도 8개의 노선이 일괄예타 통과 성과를 거둔 것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북도와 오랜 시간 준비한 철도망 구축사업에 나재점을 받아 도민들께 송구했는데, 도로 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지역 발전과 함께 도민들의 안전 보장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돼 한없이 기쁘다”며 “예타가 통과된 만큼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을 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기국회 국정감사

를 앞두고 그동안 국가교통인프라 사업의 전북 패싱을 지적하며, ‘전북 뚝’을 반드시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김윤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 3, 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통해 진행된 사업에서 전북이 사실상 사업비율과 반영비율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국가의 행정 목적상 중요 도로)에서는 광역시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 강원, 충북을 비교해도 전북이 가장 낮은 액수다.

서 교통 소외는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켜 지역내후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이라며 “계속해 경제적 논리에만 입각해 교통정책을 세운다면, 지역 불균형으로 대도시권 이외 지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윤덕 의원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시각에서 접근해 제2차 국가도로망과 제5차 국도·국지도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하반기 최종 확정을 앞둔 국가교통망 개발계획에 전북의 요구 사항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신념 아래,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국토부 장·차관들을 상대로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는 전북 지역 사업 반영을 요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 “내년부터 워드 코로나 예산 패러다임 변화 필요”

### 민주 이낙연 전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면담 “검찰개혁 특위 다시 구성해야” 건의도



더불어민주당 당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25일 윤호중 원내대표를 찾아 ‘워드 코로나’ 방역 전환에 따라 내년 예산을 확장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네 가지 요청을 드렸다”며 “첫째 내년도 예산을 워드 코로나 전환에 맞게 충분한 확장적 편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당정 간 논의된 것은 올해의 연장선상 안에서 편성되고 있다”며 “그러나 내년부터는 워드 코로나 전환과 동시에 회복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 고봉에 진통제를 놓는 시기지만 내년부터는 회복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돼야 한다”며 “예산의 패러다임이 부분적으로라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안에 일정상 예산안의 골격을 바꾸기 어려운 상태라면, 국회 심의단계에서 초기부터 정부추진과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앞서 당정은 전년 예산안 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예산과 1.2차 추경을 합한 604조 7000억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더 과감하게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3일 워드 코로나 기조에 맞춰 내년도 국가예산을 선제적으로 확장 편성하자며 “국가예산 650조 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윤 원내대표에게 검찰개혁 특위를 다시 구성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윤 원내대표가) 원내 사장이 아니라 당의 일이기 때문에 당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내대표로서는 원내 차원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공청회를 비롯해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해서 의견을 모아가는 것으로 법사위에 주문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설치 관련 국회법과 언론중재법의 분회의 처리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이 전 대표는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언론중재법과 관련, “언론 피해자 구제에 획기적 진전 있을 것”이라며 “해당 법을 언제 처리할 것인가는 원내 차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 남북교류기금 존속기한 2027년까지 연장

### 전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 통일부, 지자체 협력 공모 적극 대응

전북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우범기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도의회·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전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를 25일 개최했다.



전북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우범기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도의회·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전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를 25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우범기 정무부지사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정부 정책방향과 전북도의 남북교류협력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남북교류 직접추진을 위해 통일부로부터 지난 3월 ‘전북도 남북지민사업자 지정’을 받은 것과 내년 조례제정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조성된 ‘남북교류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해 전북도의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통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사업승인 공모에 신청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도는 이번 공모를 위해 기존 발굴사업 및 신규제안 사업, 시·군 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에 실무기획단 회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검토해왔다.

공모는 지자체가 직접 북한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승인 요건 충족 시 북한 관련 합쳐서 추후 보인을 조건으로 통일부에서 사업승인 예정이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경색된 남북관계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실질적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대북 정책 틀 내에서 전북도의 강점과 특성을 살린 교류협력사업을 선정하고, 통일부 공모 등을 통해 남북교류 재개 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새만금 수목원 건립 전북기업 우대기준 적용을”

### 민주 이원택 의원,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산림청에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수목원 건립 시 전북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하도록 산림청에 촉구했다.



또, 전북기업 우대기준이 시행된 전, 후를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하다. 제도 시행 전인 18년 11월에는 남북 도로 1단계 건설공사에 지역기업이 참여한 비율이 3.4%로 각 5%, 10%에 불과했다.

반면, 제도가 적용된 남북도로 2단계 건설공사에서는 1.2공구의 각 컨소시엄별로 지역기업 참여비율이 최소 28%~최대 51%까지 상승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김제시, 부안군, 군산시 등은 지난 2018년 6월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새만금 지역 내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대형공사에 전북기업 우대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새만금 사업이 달성하려는 국가균형발전의 목적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전북도 등이 합의한 지역상생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면서 “산림청도 새만금수목원 건립 사업에 새만금사업 상 전북기업 우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오산 신지~영만 국도신설 예타 통과 다행”

### 민주 김수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익산시 갑, 기획재정부위원회)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오산신지~영만 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국대도) 개설사업이 기재부 일괄예타를 통과해 나후민익산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4일 예타 통과에 성공한 ‘신지~영만 국대도’는 오산신지~신지 21번 국도에서 영만리 ‘활동-오산 국대도’를 잇는 길이 7.05km의 왕복 4차선 국도이며, 총 1,888억원이 투입돼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 도로가 완성되면 익산사내(KTX 익산역)에서 새만금을 연결하는 핵심



축이 될 것이며, 익산이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철도와 함께 SOX인프라를 구축 지역 발전은 물론 기업 유치 및 신산업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수홍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안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이 무산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었는데, 2,000억 원에 달하는 신지~영만 국대도가 반영돼 익산시민께 좋은 소식을 전해 드려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여야, 30일 본회의 합의

여야는 25일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기현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연기가 됐는데 추

가 의사결정을 협의한 결과 오늘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 열여 모두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16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박영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본회의 연기 주장을 수용하면서 불발됐다. /뉴시스

# 비전발표회 직후 “초등 학예회 같다”

### 국힘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5일 당 대선 경선추진위원회(경선위)가 주최한 ‘비전발표회’를 마친 뒤 “초등학교 학예회 발표처럼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전발표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발표회에서 당의 통합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그런 부분을 이야기 했느냐”며 “(이초에)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고 직격했다.

홍 의원은 자신이 주장한 대선 후보를 부동산 결정에 대해 “국회의원들도 하는데 당연히 해야되지 않겠느냐”며 “부동산 문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선 후보들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자료를 제출하고



동참하지 않으면 대선 후보 자격이 없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저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검증 받고 무협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권익위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의원직 사퇴를 발표한 윤호수 의원에 대해 “거기에 대한선 이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당 대표실에 자신을 평가절하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김재원은 그 시기에 많은 입사고를 쳤다”며 “내년 3월9일까지 1년간의 입을 좀 묶어놔야 한다. 그 이후에는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지만 내년까지 입을 좀 묶어줬으면 한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예타 통과 ‘공정’

### 국힘 정운천 의원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영호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사업(총사업비 6,824억원)’이 지난 24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며 “진정한 국민통합에 한 발 더 다가갔다”고 밝혔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영호남 공동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지난 6월 대정부질문에서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국민통합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영호남 공동사업들을 국가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5월 28일 영호남 공동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전주~김천 철도’, ‘전주~무주~대



구 고속도로’,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들의 국가계획 반영과 ‘섬진강 영호남 복합형 환승공원’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정운천 위원장은 “영호남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과 꿈이 비로소 결실을 맺었다”면서 “여수~남해 해저터널을 비롯해 영호남 공동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전주~대구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여부가 곧 결정된다”면서 “이번 국가 계획에 반영돼 진정한 국민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